



[해설]
훈돈의 회계
감사 수수료 급증
03



코스피
2443.98
(-5.83)

코스닥
850.85
(+23.63)

금리
(국고채 3년)
2.31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80.90
(+4.40) (9일)

LG그룹 압수수색 재계 “당혹·참담하다”

檢, 조세포탈 혐의 조사

검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G그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LG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계열사 간 거래 관계와 오너 일가의 주식변동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LG그룹 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

/정은미 기자 21cindiun@

JY, 中·日 출장 마치고 귀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중국과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대표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어 일본에서 오사카와 도쿄를 오가며 주요 거래선과 미팅을 가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2 일 중국 선전 출장길에 오른 이 부회장은 이날 민항기를 타고 8일 만에 돌아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등 DS부문 사장 4명과 함께 선전을 이동했다. 중국에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의 왕촨푸 회장을 비롯해 런정페이 회장, 레이쥔 샤오미 회장, 션웨이 BBK(비보)의 모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면담했다.

이후 중국 출장을 마친 뒤 4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의 사장들은 모두 귀국했고 이재용 부회장만 혼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으로 넘어간 이 부회장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과 주요 고객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중국과 일본 출장에서 혁신 기업들과 시너지를 넣 수 있는 신사업 협력을 논의와 함께 주요 거래선과의 협력을 다진 후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혁신과 新관치사이… 금융의 역주행

文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上〉 엇갈리는 평가

성장보다 쇄신·포용 치우쳐
금융경쟁력 위한 정책 필요
금감원 비리 등에 동력 약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금융부문 쇄신 방안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채용비리 등 금융 적폐 청산에 나섰지만 평가는 엇갈렸다.

재계에서는 이를바 ‘오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진 LG그룹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주요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주요 그룹은 계속해 검찰 수사를 받고, 지배구조 모범으로 꼽혀온 LG그룹마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점에 참담하다”며 유플러스를 드러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文 정부 출범 1년간 주요 금융정책 현황〉

주요 정책

법정 최고금리/연체금리 상한/카드 수수료를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가계부채 대책 발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권 전반 쇄신방안 권고
주요 현안기업 구조조정 추진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발표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 성장보다 쇄신 치우친 금융혁신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취약계층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
빚 증가 억제 정책은 일정 부분 성
과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
업을 시작하며 금융권 ‘메기’ 역
할을 해냈고, 혁신모험펀드 조성
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
표됐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쇄신과 포
용에 치우치면서 향후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
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

이병운 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

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
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
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방
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
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
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
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쇄신과정에서 ‘신관치’ 공방도
벌어졌다. 금융업 전반에 대한 개
혁이 아니라 금융사 개개별의 잘
못된 행태나 행위에 대해 간섭하
면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

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최고경영자
(CEO) 선임과정에 일부 지주사
의 CEO 연임 등을 공개적으로 비
판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은 커졌
고, 여전히 몇몇 금융사들과는 대
립하는 양상이다.

◆ 금융혁신 동력 약화시킨 감독 당국 리스크

금융혁신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동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금융회사 채용비리를 감독해
야 할 금감원 역시 채용비리가 드
러났다. 내부개혁을 위해 민간 출
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최종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후임인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 2주 만
에 사임하고 말았다.

지난 8일 취임한 윤석현 금감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
써 세 번째 수장이다. 연이은 도덕
성 비판에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민
간 출신을 낙점해 금융 개혁에 대
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韓·日·中 “3國 FTA·자유무역지대” 추진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평
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중국과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
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미세먼
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고령화 정
책 등에서도 밀도 있는 협력을 지
속해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관광 등 3국간 오가는 인적 교류
인원을 3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하는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에코쿠(帝國)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
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3국이 정상회의를 연 것은 지
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

이다.

특히 이날 3국 정상은 ▲3국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정
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
문’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
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3국은 역
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
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항구적 평
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

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3국이
함께 손을 잡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또한 한
·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아주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
역협정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
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
직”라면서 “우리 3개국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
하고, 실질적 행동을 통해 한·중·
일 3개국의 FTA 창설 협력 토론
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